

대선주자들의 ‘공정’ 논쟁 감상법

강철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 요약 ■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공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은 ‘역강부약으로 대동사회’를, 윤석열은 한평생 기회균등을 실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 역강부약을 할 것이며, 초기 불평등 상황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기회균등을 실현할 것인지 알 수 없다.

공정은 신봉하는 철학과 역사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분배 평등, 기회균등, 필요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등 다양한 공정이 대립한다. 현대는 소득,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격차와 불평등이 구조화되는 신신분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공정은 인간존중의 가치 실현이 중요하다. 대선주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평가해볼 일이다. 어느 경우든 오늘날의 공정은 생명 존중, 자유 확대, 신뢰 구축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필자의 견해는 본 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선주자들의 ‘공정’ 논쟁 감상법¹⁾

여야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공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여권 이재명 주자는 행정시스템을 바로잡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의 가치 아래서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야권 윤석열 주자는 특정분야와 시장에서 공정실현과 개인에게는 전생애에 걸쳐 기회 균등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이재명의 공정은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성 확보’가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윤석열의 공정은 “취업이나 입시에서 불공정을 느끼는 청년세대와 같은 특정분야, 또는 특정 시장에서 룰에 따라 경쟁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 그리고 생애주기에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기회균등”을 내세웠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 “부자를 때려잡는 식은 안된다”는 발언도 했다.

이재명은 윤석열의 공정은 잘못을 응징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과거지향적 공정이며 자신의 공정은 행정시스템의 개혁을 의미하는 미래지향적 공정이라고 주장하였다. 과연 이 두 주자가 말하는 공정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누구의 공정이 더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철학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공정

공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신봉하는 철학과 사회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한 공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분배의 평등’이나 혹은 ‘기회의 균등’이냐의 논쟁이 있을 수 있고, 필요에 따

른 분배(배고픈 자, 위급한 환자 먼저)나 혹은 능력에 따른 보상(일한 만큼 받는다)이냐로 갈릴 수도 있다. 법규와 계약에 따른 공정성이냐 혹은 인간성을 존중하는 공정성이냐로 대답할 수도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분배의 평등, 필요에 근거한 공정성 등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놓고 먹는 자가 나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여도 만큼 못 받을 경우 불평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기회의 균등, 계약에 의한 공정성 등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에도,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밖에 있는 초기조건(initial endowments)의 차이로 생긴 불평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경쟁 속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불평등, 자유계약시 교섭능력의 차이나 나쁜 계약으로 인한 불공정(예, prisoner's dilemma)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BC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 법치를 통한 공정을 내세운 최초의 기념비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자유민, 천민, 노예의 3신분제에 맞는 농업사회 공정법이었다. 함무라비를 ‘정의의 왕’이라 서문에 새겨 넣었지만 가장 심한 불공정이었던 신분제는 그대로였다. 고대 로마에서는 BC 495년 정복전쟁의 전리품을 독점한 귀족들에 반발하여 시민들이 몬스 사케르 성산에 올라 1년여 동안 내려오지 않고 항거하였다. 그 결과 시민을 대변하는 호민관제도가 도입되었고 평민회가 설치되었다. 또한 노예를 자유민으로 격상하는 해방노예제도를 시행하여 로마의 장기안정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중세 농노제 사회에서는 토지와 종교에 얽매인 농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 시대의 공정과제였다. 이탈리아 피렌체, 베네치아 등 자유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르네상스가 이를 실현하여 속박되었던 중세인을 자유롭고 주체적인 근대인으로 바꾸어 놓았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한 이들 평등한 근대인들이 그 후 종교개혁, 과학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을 주도했다. 그리고

1) 이글은 필자가 Leaders' World 2021년 8월호에 “이재명의 공정 vs 윤석열의 공정”이라는 칼럼으로 게재했던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삼권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 장치를 정치에 도입하는 등 역사발전을 이끌었다. 공정의 실현이 역사를 바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말 문란했던 권문세가의 토지경병에 대하여 공사전적을 불태우고 경기이외 지역의 농지를 국유화하는 등 이성계의 과감한 전제개혁이 있었다. 이 결과 노비가 해방되고 전호로 전락했던 농민의 신분이 일부 회복되면서 조선이 건국되었으나 조선시대 내내 반상의 신분제는 엄격했다. 일제의 식민지배의 속박에서 벗어난 광복 후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농지개혁으로 지주-소작관계를 해체함으로써 평등한 시민사회가 출현하였다. 그 토대 위에서 지난 70여 년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체가 되어 시장경제와 교육기회의 균등을 이루었다.

오늘날 시대정신에 맞는 공정은

대선주자들이 공정을 내세웠다면 당연히 우리의 시대정신에 맞는 '공정'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해야 한다. 그 내용은 신봉하는 철학과 역사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역사발전이란 생명과 인간존중, 개인의 자유확대, 사회관계의 신뢰구축 등 인류가 지향하는 기본가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줄고 2016, 강한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참조), 신분제는 인간존중에 반하고 자유를 억압하며 사회갈등을 조장하여 역사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분제 해체는 평등사회를 만들어 역사를 발전시키는 공정실현일 것이다.

오늘날 신분적 평등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경제는 최근 그 결함과 횡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능력주의(Sandel, 2020, 능력주의의 폭정 참조)가 지배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유경쟁이 보장되면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일하고 분배는 시장이 알아서 공정하게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결과의 불평

등은 복지제도로 보완하려 한다. 그러나 현실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정치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각종 격차가 확대되는 현대판 신분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복지제도가 격차의 일부를 완화시키는 역할은 하지만 신분자체를 이동시키지는 못한다. 사회구성원들 간의 불평등과 소득의 양극화는 정도 차이는 있으나 모든 나라에서 진행되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심하고 외환위기 이후 짧은 시간내에 급속히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신신분사회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다시 공정사회로 돌려놓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심리학자들은 심리적 부(psychological wealth)²⁾의 수지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를 정의롭다고 설명한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라 할 수 있는 심리적 부는 외부의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 해악에 의해 수지균형이 깨어질 수 있는데, 가해자 처벌이나 상응하는 배상을 받음으로써 수지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되며, 이는 ' 좋음'보다 '옳음'이 느껴질 때 나타나므로 정의롭다고 보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는 '옳음'이 깨진 상태이며 시장의 불공정이 존재함을 뜻한다. 자산소득의 불공정이 발생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과연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개인의 심리적 자산의 수지를 맞추어 마음을 평안한 상태로 만들까? 그것을 푸는 것이 오늘날 필요한 공정이다. 일반적으로 기회균등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잘 지킬 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쟁의 출발점에서부터 태생적 불평등과 불공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같이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빈부 격차, 그에 따른 청소년들의 사회진출 불평등,

2)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 영어로 'well-being'을 의미함

도시와 농촌의 격차, 인종과 성별 차이, 장애 여부 등 다양한 초기 격차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기회균등 조치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답해야 한다.

초기 격차 시정으로 양극화와 신신분제를 해결해야

오늘날 불공정과 불평등은 소득과 권력 등의 양극화와 그것이 빚어낸 신신분제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라기 보다는 정치와 경제에 만연된 독점집단의 이기주의와 더불어 시장밖에 존재하는 초기 불평등과 불공정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불편해지고 분노로 증폭되곤 한다.

소득양극화와 신신분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시장규칙을 잘 지키는 것과 더불어 시장제도나 경쟁제도 밖의 불공정 문제도 풀어야 한다. 나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출현하는 빅 데이터, AI, 플랫폼 등을 지배하는 위협적인 독점에도 대응해야 한다. 억강부약이 그럴듯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부자를 때려잡을 일도 아니다. 따라서 능력주의의 약점인 태생적 불평등, 기득권, 우연성, 운 등에 의한 격차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는 중요과제가 된다. 그 원인을 찾아 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수요인 식, 주거, 의료 등에서 마음이 편안하도록 하고 고용대책, 노령자 보호, 영유아 양육, 교육, 의료 등을 평등하게 하는 공정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 방법으로 적발, 처벌, 보상, 개선, 시정 등 모두 필요하다. 어떤 것은 적발 처벌에 의해 시정될 수도 있으나 현행법 밖에 있는 불공정 등에 대해서는 입법, 사회적 합의, 행정조치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는 사회연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대선주자들은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역사 인식으로 이에 대응할 것인가.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공정실현인가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시정주의를 함께 지향할 것인가가 관심이 간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이 중요할 것이다. 예컨대 현재 논쟁이슈가 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기본 복지제도의 확장, 국민 기본소득제 등이 해결책이 되는지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 기본소득제의 경우 이의 도입여부 논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 제도의 논리적 기반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토지나 지식이나 빅 데이터와 같이 공유재 성격이 강한 생산 요소들에 대하여 국민 개개인이 주주로서 배당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규모가 크고 작은 것과 관계없이 도입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시대에 맞는 공정대책을 통해 누구나 기본권인 생존권과 신체 사상 재산 면에서 자유권을 보장받아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 결과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 신뢰하며 협력하는 삶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오늘날의 공정은 생명과 인간의 존중, 자유 확대, 신뢰 구축 등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 실현이라는 역사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SIES**

|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로 현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Northwestern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장과 우석대 총장을 역임하였다.